

2021년 대규모유통업 분야 동향

관련 구성원

김 시 주 변호사

T 02.772.2747

E sjk@hmplaw.com

안 영 은 변호사

T 02.772.2742

E yeon@hmplaw.com

김 영 열 변호사

T 02.772.2778

E youngkim@hmplaw.com

이 선 주 변호사

T 02.772.2841

E leesj@hmplaw.com

이 태 훈 변호사

T 02.772.2858

E leeth@hmplaw.com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0.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이하 “반품지침”) 개정안 역시 2021. 6. 10.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은 최근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 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바, 사업자로서는 관련 개정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충정은 대규모유통업법 및 반품지침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개정 사유]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매장임대차거래 등과 달리 직매입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대금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세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①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8조 제2항), ② 법정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개정안 제8조 제3항), ③ 이러한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상품권 내지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개정안 제8조 제4항). 위 개정 내용은 2021. 10. 21. 개정안 시행일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됨 (개정안 부칙 제2조)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지급 기한 관련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위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상품 대금 및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됨 • 법 위반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상품 대금 지급 등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중 직매입거래를 하고 있는 유통업자에게는 일정한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판매수탁자 추가

[개정 사유] 현행법은 매장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사업자 (이하 “판매수탁자”)에 대해서는 - 매장임차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은 보호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판매수탁자도 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② 질병의 발병 및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개정안 제15조의2). 위 개정 내용은 2021. 10. 21. 개정안 시행일 이후 판매수탁자가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개정안 부칙 제3조)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법 위반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판매수탁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됨

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개정 사유] 현행법은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①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개정안 III. 1. 나 및 다), ②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IV. 3. 3), ③ (직매입거래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고 (개정안 IV. 3. 2 가)), ④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음 (개정안 III. 2. 가)

개정 항목	개정 내용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p>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아래와 같은 예시를 추가함</p> <div> <p><예시> 직매입거래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 (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 •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div>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시즌상품인지 여부를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함

[기대효과] 금번 개정안을 통해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 및 반품지침이 최근 납품업자 및 판매수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개정된 바, 대규모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물론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자 역시 개정 법령의 집행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총정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적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